

자조금 대의원 역할 기능 강화해야

‘자조금 발전정책 · 법개정’ 토론회



축산자조금 대의원회가 자조금의 최고 의결기구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한국자조금연구원이 지난 2월 28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한 '2008년 자조금 발전정책 및 법 개정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제기됐다.

박종수 한국자조금연구원장(충남대 교수)은 이날 발제를 통해 “대의원회는 농민의 직접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 산업대표 최고의 의결기관이어야 한다”면서 “축산자조금법에서는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의무거출금의 납부여부 및 금액, 자조금사업의 계획 및 결산의 승인 등으로 명시하고 대의원회의 운영과 그 밖의 사항은 축산단체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대의원회의 기능 및 역할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역할과 기능 이외에 대의원 중에서 선출되는 관리위원과 관리위원장은 대의원회에서 직접 선출토록 하고 일부 당연직과 학계 및 유통전문가 등은 주무장관에

게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의원의 역할과 기능 강화해야

토론자로 참석한 정종극 양돈협회 부회장은 “대의원이 직접 관리위원을 선출해야 한다”며 “대의원회는 자조금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의견을 내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가져야 한다”고 밝히는 한편 “축산자조금 대의원회가 자조금 최고 의결기구가 되도록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자조금 거출 대상의 확대를 요구했다. 수입업체를 비롯해 유통·가공업체 등도 산업 발전시 혜택을 보는 만큼 자조금 거출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

정종극 부회장은 “자조금 홍보가 수입육의 소비를 높여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수입육에도 자조금을 부과해 축소된 산업을 보전하는데 일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현행 5%인 운영비의 탄력적 운영, 정부의 매칭펀드 지원 확대, 농가 및 정부 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자조금 철저한 자조금 교육 등의 필요성도 요구됐다. 이와 관련하여 한우자조금 관리위원회 황엽 사무국장은 “자조금 운영비를 5%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효율성을 떨어뜨리므로 이를 상향조정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양돈**